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의 안 변 호	4611
------------	------

발의연월일 : 2024. 10. 8

발 의 자 : 김용민 · 이건태 · 강유정
강득구 · 민형배 · 박성준
김용만 · 백승아 · 서미화
전현희 · 안태준 · 임미애
노종면 · 조계원 · 윤종균
정준호 · 김 현 · 한준호
김남희 · 박주민 · 강선우
송재봉 의원(22인)

주 문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에서 수사 중이던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밀반입 사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세청, 대통령실이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 구명로비 의혹 사건

2.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3. 제22대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4.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안이유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장 지시로 백해룡 형사2과장을 팀장으로 한 12명의 마약 수사전담팀이 마약 수사를 마무리하던 중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사 외압은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조차 무혐의 또는 수사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상당히 손상되었음.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을 당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단체 채팅방에 언급한 이후 윤석열 부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

고, 불과 나흘 뒤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하며 주가조작 정황이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수사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검찰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여타 공범들의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초지일관하는 것은 물론이고 ‘BP패밀리의 존재여부’, ‘김건희-이종호와 40차례 연락’ 등 증거를 입수하였음에도 김건희에 대해 출장 조사만을 실시한 채 명확한 수사 없이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음.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음.

국회에서는 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및 안전심의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료제출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음. 또한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의 일부가 합당한 사유 없이 단순 불출석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였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

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임. 특검법상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추천방식에 대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나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개시되어 특별검사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사건들과 관련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를 중심으로 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실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권 남용 등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정성 회복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